

조세 · 재정 BRIEF

kipf 한국조세연구원

2013. 2. 22(금)

해외 조세 · 재정 현황 및 전망

요 약

- 북유럽을 제외한 많은 유럽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이 낮은 반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주요국 재정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
- 미주지역은 2012년에 재정수지가 개선되었고, 국가부채 상승세가 완화되었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(조세정책) 2012년도에는 주로 법인세 인하 및 조세감면의 정비 경향을 보임
 - (재정절벽)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되던 조치들이 2013년도에 종료되고,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급격한 경제위축이 우려
- 유럽지역은 긴축재정과 증세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재정건전화 강화 기조 하에 재정적자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
 - (조세정책) 2012년도에는 세수확대를 위한 증세정책을 시행
 - (유럽재정위기)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과 위기로인이 상존하는 혼조세
-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은 비교적 건전한 재정상태를 보였으나 세계무역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도 재정수지 적자폭이 증가
 - (조세정책) 비교적 재정상황이 양호한 국가 위주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

- (일본 양적완화) 신임 총리 아베 신조는 양적완화의 무제한 확대를 선언하였으며 12월 총선 승리 이후 양적완화의 추가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탈피와 엔화 강세 저지 도모
- (중국 소비진작 정책) 중국정부는 2012년 12월 「국내무역 발전 12차 5개년 계획(国内贸易发展"十二五"规划)」을 발표하여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

주요국의 재정현황과 조세정책

- 2012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수치를 바탕으로 4개 그룹으로 구분
 - 북유럽을 제외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각각 60% 이상, 3% 이상을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낮음
 - 미국과 캐나다 역시 높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수준을 보임
 -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주요국 재정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

[해외 재정상황 및 조세정책]

재정적자 3% 이상	국가채무 60% 이상						국가채무 60% 미만										
	국명	조세정책방향			재정수지	경제성장률	국명	조세정책방향			재정수지	경제성장률					
		소득세	법인세	부가세				소득세	법인세	부가세							
재정적자 3% 이상	미주	미국	(-),(+)	(-)		▲	▽										
		캐나다	(+)	(-),(+)	(-)	▲	▽										
	유럽		그리스	(+),(-)	(+)		▲	▲									
			이탈리아				▲	▲									
			포르투갈				▲	▲									
			아일랜드				▲	▲									
			영국	(-)	(-)	(+)	▽	▲									
			프랑스	⊕	⊕	⊖	▲	▲									
			스페인	⊕, ⊖	⊕, ⊖	⊖	▲	▽									
			영가리				▲	▲									
			오스트리아	⊕			▲	▲									
			네덜란드	(+)	⊕	⊕	▲	▲									
		폴란드				▲	▽										
		덴마크	(-)	(+),(-)		▲	▲										
	아시아		일본		⊖	⊕	▽	▽									
		이스라엘				▲	▽										
	인도*				▲	▲											
재정적자 3% 미만	유럽		슬로베니아				▲	▲									
			슬로바키아				▲	▽									
			체코				▲	▲									
		아시아 및 오세아니아		말레이시아*				▽	▲								
				태국*				▽	▲								
				대만*		⊕		▲	▲								
			뉴질랜드	⊕, ⊖			▲	▲									
		미주		멕시코*				▲	▽								
				칠레*				▽	▽								
			유럽		스웨덴				▽	▲							
				노르웨이				▲	▽								
				스위스				▽	▲								
	아시아 및 오세아니아		독일				▽	▽									
			핀란드				▲	▲									
			한국				▲	▲									
		홍콩*	(-)	(-)		▲	▲										
		인도네시아*				▽	▲										
	싱가포르*	(-)	(-)	(-)	▽	▲											
	중국*		⊖		▲	▲											
	오주	(+)	(-)		▲	▽											

주: 1) 재정적자(GDP대비 3%) 및 국가채무(GDP대비 60%)를 기준으로 두 기준 모두 이상인 그룹, 한 기준만 이상인 그룹, 두 기준 모두 미만인 그룹으로 구분
 2) 조세정책방향은 2012년도에 확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⊕와 ⊖, 논의 중인 상태는 (+), (-)로 표시하고 있으며 (+)는 세수증대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
 3) 재정수지와 경제성장률의 부호방향은 2012년도대비 2013년도의 증감을 나타냄
 자료: OECD, *Economic Outlook 92*(2012.11월), *IMF, *World Economic Outlook* (2012.10월), 한국조세연구원, "주요국의 조세동향", 2012년 각호

II 미주

1. 재정현황 및 전망

- 미주지역은 2012년에 GDP 대비 재정수지가 개선되었고, 국가부채 또한 상승세가 완화되었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- (미국) 주택·고용 및 소비심리가 개선되며, 경제가 점차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, 재정절벽 및 정부부채한도 상한조정 등 여전히 재정에 대한 불안요소가 존재
 - 2012.9월에 3차 양적완화정책(QE3)을 시행하는 등 향후,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 수요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
- (캐나다) 정부 프로그램의 지출삭감 및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을 통해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될 전망
- (멕시코) 2012년 공공부문 필요차입액이 GDP대비 2.9%로 감소하는 등 재정관련 지표들이 개선됨에 따라, 2013년에도 재정건전화 정책이 지속가능할 전망

< 최근 미주의 재정 추이 및 전망 >

(단위: GDP대비 %, %p)

	재정수지						국가부채			
	2010	2011	2012	전년 대비 ²⁾	2013	전년 대비 ²⁾	2010	2011	2012	2013
캐나다	△5.4	△4.3	△3.5	0.8	△3.0	0.5	83.0	83.4	85.8	85.5
미국	△11.4	△10.2	△8.5	1.7	△6.8	1.7	97.8	102.2	109.8	113.0
멕시코	△4.3	△3.4	△2.4	1.0	△2.1	0.3	42.9	43.8	43.1	43.2
칠레	△0.3	1.4	△0.3	△1.8	△0.6	△0.3	8.6	11.3	11.4	12.3

주: 1) 일반정부기준

2) 전년대비 증감

자료: OECD, *Economic Outlook 92* (2012.11월), IMF, *World Economic Outlook* (2012.10월)

2. 조세정책 현황

- 미주지역에서는 주로 법인세 인하 및 조세감면의 정비 경향을 보임
 - 미국은 2012년도 말 이후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종료 등 부시 감세정책이 종료될 예정이고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
 - 하지만, 급격한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해 일부 고소득층의 감면혜택만 종료되고, 대부분은 현재 연장된 상황
 - 캐나다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(또는 인하)보다는 조세제도 정비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

< 2012년 미주 주요국 조세정책 >

국가	조세정책		세수 효과
	세목	주요내용	
캐나다	소득세	노령층 생활안정지원과 소득보조혜택 적용하기 위한 기준연령 상향조정(65세→67세)	(+)
		해외취업세액공제 단계적 폐지	(+)
	법인세	클린에너지사업관련 자본비용공제 대상 확대	(-)
		특정광물자원 채광비용에 대한 법인세액공제 단계적 폐지	(+)
	소비세	의료서비스 면세 적용범위 및 영세율 적용항목 확대	(-)
미국	소득세	2012년 2월 종료예정이었던 사회보장세 인하정책을 연말까지 연장	-
		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영구화	(-)
		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 종료	(+)
		‘버핏룰’과 관련해 연간소득 1백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가 최저 30%의 세율 부담	(+)
	법인세	소기업 조세감면 확대	-
		연방 최고법인세율 인하(35%→28%)	(-)

주: ()는 논의중인 상태이며, (+)는 세수증대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짐을 의미
 자료: 한국조세연구원, “주요국의 조세동향” 2012년 각 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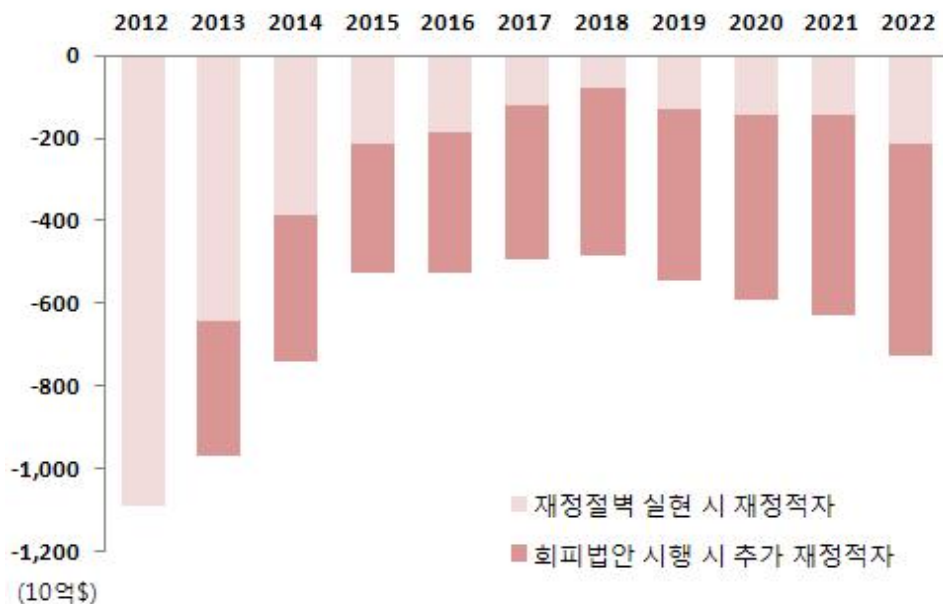
3. 주요 이슈

□ (재정절벽)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되던 여러 조치들*이 2013년에 종료되고,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, 급격한 경제위축이 우려

*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산 될 당시, 부시감세법(Bush Tax Cut)은 201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고, 예산통제법(BCA)에 따라 2013년 초 재량지출 자동감축 등이 시행될 예정이었음

○ (현황) 2013.1.2일 재정절벽 회피법안(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)이 상·하원 통과되면서 재정절벽 실현에 대한 우려는 다소 해소

[재정절벽에 따른 재정적자 변화추이]



자료: CBO, "Choices for Deficit Reduction" (2012.11) & CBO, "Estimate of the Budgetary Effects of H.R.8,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" (2013.1)

- 하지만, 예산통제법에 따른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는 2013.3.1일까지 보류됨에 따라, 여전히 불안감이 잔존

○ (영향) 동법안에 따라, CBO는 재정긴축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축소되고, 재정적자는 확대 될 것으로 전망¹⁾

1) CBO, "Choices for Deficit Reduction" (2012.11) & CBO, "Estimate of the Budgetary Effects of H.R.8, the

- 2012.11월, 재정절벽이 실현될 경우, 재정적자는 2012년 1조 890억달러에서 2013년 6,410억달러로 4,48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
 - 즉, 2013년 예상되는 기존 재정긴축 규모는 약 4,480억달러 수준
- 2013.1월, 재정절벽회피법안 시행으로 2013년에 세입이 2,798억 달러 감소하고 지출이 498억 달러 증가하여 3,296억 달러 상당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
 - 동법안으로 인해, 2013년 실질적인 긴축규모는 1,184억달러로 축소
- 향후 10년간(2013-22년)은 총 3조 9,712억 달러 상당의 적자가 늘어날 전망

<참고> 재정절벽 회피법안(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)

□ 동법안은 총 9개 부문으로 구성

- (국세) 고소득층(연소득 개인 40만달러 이상, 부부합산 45만달러 이상)의 소득세율을 35%에서 39.6%로 인상하고, 그 외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종전 세율 유지
 - 고소득층의 자본이득(Capital gain)과 배당소득 세율을 15%에서 20%로 인상
 - 500만달러 이상의 경우, 증여세율을 35%에서 40%로 인상
 - 대체최저한세(AMT: Alternative Minimum Tax) 제외대상 소득기준을 2012년의 개인소득 50,600달러, 부부합산 소득 78,750달러에서 2013년 각각 51,900달러, 80,800달러로 상향 조정
- (개인소득세) 소득에서 모기지 채무에 대한 탕감액(최대 200만달러까지)을 공제시키는 법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 각종 세제 감면혜택 연장
- (법인세)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연장
- (의료) 노인의료보장(Medicare)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수가를 26.5% 삭감할 계획이었으나, 2013년까지 현행 유지
- (정부지출) 예산통제법에 따른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(Sequestration)는 2013.3.1일까지 2개월 간 보류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침
 - 동조치로 FY2013 금년 삭감분 1,090억달러가 850억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
자료: Senate Committee on Finance, "Summary of Provision in The American Relief Act of 2012" (2013.1.9)

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" (2013.1)



유럽

1. 재정현황 및 전망

- 유럽 주요국은 EU국가의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긴축재정과 증세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재정건전화 강화기조 하에 재정적자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
 - (유럽) GDP 대비 재정적자는 '12년에 비해서 '13년에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
 - 유럽 주요국들은 점진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통한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정책 시행
 -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되기 전까지 국가 부채는 매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
 - (프랑스) '13년 예산안은 재정지출 감소 및 세입 증대에 초점
 - 운영비용 감소, 공무원 인원 삭감 등의 재정 감축과 소득세,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 증대안 마련
 - (그리스) 지속적인 IMF 구제금융을 위한 긴축재정정책의 유지와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시행
 - '12년 대비 '13년 세입은 4.5%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출을 8.5% 감소 시켜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예정
 - (이탈리아) 다년도 예산 조정 가이드 라인에 따른 '13년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정부 예산 축소 등의 정책 시행
 - '12년도 계획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 및 지방정부 예산 관리 감독 강화
 - (포르투갈) IMF 구조조정 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정정책 시행
 - '12년 대비 '13년에는 43억 1,500만 유로의 세입 증가, 26억 9,900만 유로의 세출 감소를 통한 재정건전화 시행 계획
 - (스페인) GDP 대비 약 1.23% 규모의 긴축예산안 마련
 - 44억 유로의 세입 증가, 사회보장 예산을 제외한 정부지출규모의 7.3%를 감축할 계획

< 최근 유럽의 재정 추이 및 전망 >

(단위: GDP대비 %, %p)

	재정수지						국가부채			
	2010	2011	2012	전년 대비 ²⁾	2013	전년 대비 ²⁾	2010	2011	2012	2013
프랑스	△7.1	△5.2	△4.5	0.7	△3.4	1.1	95.5	100.0	105.1	108.2
독일	△4.2	△0.8	△0.2	0.6	△0.4	△0.2	86.3	86.4	87.6	86.2
그리스	△10.8	△9.5	△6.9	2.6	△5.6	1.3	153.0	175.2	181.3	193.2
이탈리아	△4.3	△3.8	△3.0	0.8	△2.9	0.1	126.7	119.8	127.0	129.6
네덜란드	△5.0	△4.4	△3.8	0.6	△3.0	0.8	71.6	75.9	82.5	83.6
포르투갈	△9.8	△4.4	△5.2	△0.8	△4.9	0.3	103.9	118.1	125.6	133.1
스페인	△9.7	△9.4	△8.1	1.3	△6.3	1.8	67.7	76.9	93.8	100.2
스웨덴	0.0	0.2	△0.3	△0.5	△0.8	△0.5	49.3	49.2	48.6	47.9
영국	△10.1	△8.3	△6.6	1.7	△6.9	△0.3	85.6	99.9	105.3	110.4

주: 1) 일반정부기준

2) 전년대비 증감

자료: OECD, *Economic Outlook 92* (2012.11월)

2. 조세정책 현황

- '11년 재정건전화를 위해 증세를 실시한 유럽국가들은 '12년에도 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
 - 세수확대를 위해 소득세, 법인세 등의 세제정책의 변화나 증세 조치 시행
 - 기존 소득세에 더해 증권거래세,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세제 개편 조치가 시행

< 2012년 유럽 주요국 조세정책 >

국가	조세정책		세수 효과
	세목	주요내용	
오스트리아	소득세	부정기적 급여에 대한 부가세(surcharge) 부과	+
		부동산 자본이득세의 보유기간 요건 폐지	+
	금융거래세	2014년까지 금융거래세(financial transaction tax)도입할 계획	+
벨기에	법인세	자본이득 소득공제 요건 강화(주식보유기간 요건 신설)	+

10 해외 조세재정 현황 및 전망

국가	조세정책		세수효과
	세목	주요내용	
	소득세	연 20,000유로를 초과 소득에 대해 4%의 부가세(surtax) 추가 징수	+
		특정주식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(15%→21%)	+
	부가가치세	면세대상 일부 과세대상으로 전환, 디지털 텔레비전에 대한 부가세 인상(12%→21%)	+
	증권거래세	증권거래세 표준세율 인상(0.17%→0.22%)	+
덴마크	법인세	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제한요건 신설	(+)
		운영설비투자액 추가 감가상각 허용	(-)
		금융사업부문에 과세하는 급여세 세율 인상(10.5%→12.3%)	(+)
	소득세	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적요 과세소득 구간 하한을 상향조정	(-)
	근로세액공제 확대(4.4%→10.65%)	(-)	
핀란드	자산이전세	부동산기업의 주식이전에 대한 세율인상(1.6%→2%) 및 과세표준에 대한 범위 확대	(+)
프랑스	법인세	매출액이 250만유로 초과 법인의 경우 한시적 세율인상(33.33%→36.1%)	+
		금융비용 공제요건 강화	+
		매출액 2.5억유로를 초과하는 법인 대상 부가세(5%)를 추가로 징수	+
	소득세	과세소득이 높은 거주자에 대해 부가세(surtax) 부과(3~4%)	+
		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(19%→21%)	+
	상속세	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액 축소	+
	금융거래세	적용세율 인상(0.1%→0.2%)	(+)
부가가치세	기본세율 인상계획 취소 및 일반 도서에 대한 세율 인하(7%→5.5%)	-	
그리스	법인세	세율 인상(20%→26%)	(+)
	소득세	40%세율 적용구간 하한을 하향조정(6만유로→4만유로)	(+)
		저소득층 면세점 상향조정(5천유로→9천유로)	(-)
헝가리	금융거래세	금융거래세 도입법안 의회 제출	(+)
네덜란드	법인세	지분투자자와 관련된 이자비용 상한 설정	+
	소득세	모기지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요건 강화	(+)
	부가가치세	표준세율 인상(19%→21%)	+
	부동산취득세	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율 인하(6%→2%)	-
스페인	법인세	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경감세율 2012년까지 연장	-
		일정 규모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	+
	소득세	개인소득세율 인상(24~45% → 24.75~52%)	+
		전문활동 대가 지급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상	+
		주택구입 세액공제 대상 확대	-
	배당, 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(19%→21%)	+	
부가가치세	표준세율 인상(18%→21%) 및 경감세율 인상(8%→10%)	+	
영국	법인세	법인세 기본세율 단계적 인하(26% → ('12.4) 24% → ('13.4) 23% → ('14.4) 22%)	(-)
	소득세	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(50%→45%)	(-)
		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(42.5%→37.5%)	(-)
	부가가치세	2백만파운드 초과 고가주택의 취득에 대한 토지인지세 인상	(+)
	은행세	단기부채 적용 은행세율 단계적 인상(0.075% → ('12.1) 0.088% → ('13.1) 0.105%)	(+)

주: ()는 논의중인 상태이며, (+)는 세수증대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짐을 의미
 자료: 한국조세연구원, "주요국의 조세동향" 2012년 각 호.

3. 주요이슈

□ (유럽 재정위기)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과 위기로인이 상존하는 혼조세

- (원인) '09년 은행위기 해소를 위해 시행된 방만한 재정정책은 '11년부터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를 야기하였으며, '12년에도 유럽 경제의 위협 요소로 존재
- (현황) '12년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, 스페인 등은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으며,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부채수준을 유지
 - 최근 유럽은행들이 약 35억 유로 규모의 ECB 차입금의 조기상환계획을 밝혀 지금까지 총 약 1400억 유로를 조기상환하는 현상 등 유럽재정위기가 진정세를 보이는 상태²⁾
 - 그러나 유럽 은행들의 실적 개선 및 부실수준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낙관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존재³⁾
 - 또한 본질적인 유럽 국가들의 부채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, 재정건전화에 따른 유럽 경제 성장의 둔화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⁴⁾

< 아일랜드, 포르투갈, 그리스, 스페인 구제금융 현황 >

구분	그리스		아일랜드	포르투갈	스페인	
	1차	2차				
지원 방식	-양자간 대출 -대기성차관	-EFSF -EFF	-EFSF, EFSM -양자간 대출 -EFF	-EFSF, EFSM -EFF	-LTRO	-ESM
지원 규모	1,100억 유로	1,300억 유로	675억 유로	780억 유로	2,276억 유로	1,000억 유로

자료 : 박진호, 2011. 9. 23. 「EMU의 국가부도위기 대응과 전망」, 한국은행 한은금융강좌, p.45., IMF (www.imf.org)
EFSF(<http://www.efsf.europa.eu/about/operations/index.htm>)

2) 아시아경제, “유럽은행, 내주 ECB에 35억 유로 조기상환”, 2013. 2. 2.
3) 한국경제, “유럽 은행 위기탈출 멀었다”, 2013. 2. 4.
4) 연합뉴스, “세계경기 낙관 어렵다...”위기핵심은 미해결 상태“. 2013. 1. 31.

IV

아시아 및 오세아니아

1. 재정현황 및 전망

- 대부분의 아시아·오세아니아 국가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 상태를 보였으나 세계무역 침체 등의 이유로 상당수 국가에서 2012년 재정수지 적자폭이 증가하였음. 각 국은 2013년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여 나갈 것으로 전망
- (일본)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2013년 재정수지 적자 폭은 10.1%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, 엔고 방어로 인한 수출증가와 경기부양, 2014년 이후 소비세 인상과 지출 감축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FY2015년에는 3% 수준의 기초재정수지 달성 기대
- (호주) 2012년 재정수지는 2.8% 적자를 보였으나, 국방예산과 해외원조 감축, 소득세율 인상과 자본이득 감면 폐지 등 세수 확보 조치로 2013년 균형 재정 달성 예상
- (뉴질랜드) 2011년 7.9%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출제한을 통해 2012년 재정수지 적자폭을 3.6%로 줄였으며, FY2014-15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 효율화 및 복지 의존성 감소 등을 계획

< 최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재정 추이 및 전망 >

(단위: GDP대비 %, %p)

	재정수지						국가부채			
	2010	2011	2012	전년 대비 ²⁾	2013	전년 대비 ²⁾	2010	2011	2012	2013
홍콩	4.5	4.1	0.7	△3.4	2.1	1.5	34.6	33.8	33.1	31.0
싱가포르	7.3	7.3	5.2	△2.1	5.1	△0.1	101.2	107.6	106.2	103.4
대만	△4.1	△3.6	△3.7	0.0	△3.1	0.6	38.1	40.5	41.7	40.9
태국	△0.8	△1.6	△3.1	△1.5	△3.8	△0.7	42.6	41.7	44.2	46.2
중국	△1.5	△1.2	△1.3	△0.1	△1.0	0.3	33.5	25.8	22.2	19.6
인도	△9.4	△9.0	△9.5	△0.5	△9.1	0.4	68.0	67.0	67.6	66.7
인도네시아	△1.2	△0.8	△1.6	△0.8	△2.0	△0.4	26.9	24.5	23.9	22.2
말레이시아	△3.6	△6.9	△3.8	3.1	△4.3	△0.5	51.0	52.9	53.0	53.5
이스라엘	△4.8	△4.4	△4.7	△0.3	△4.1	0.6	76.0	74.0	73.5	73.1
일본	△8.4	△9.3	△9.9	△0.6	△10.1	△0.2	192.7	205.3	214.3	224.3
한국	1.3	0.5	0.9	0.4	1.6	0.7	34.3	36.1	36.4	36.4
호주	△4.7	△4.0	△2.8	1.2	0.0	2.8	23.5	26.7	29.3	28.9
뉴질랜드	△3.8	△7.9	△4.3	3.6	△3.6	0.7	39.6	48.3	51.3	54.3

주: 1) 일반정부기준

2) 전년대비 증감

자료: OECD, *Economic Outlook 92* (2012.11월), IMF, *World Economic Outlook* (2012.10월)

2. 조세정책 현황

- 비교적 재정상황이 양호한 국가 위주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
 - 홍콩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 환급과 소득세 환급을 시행하되 부동산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인지세 세율 인상 입법
 - 일본은 연구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다국적 기업대상 법인세 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,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환경세 도입을 통해 세수 확보
 - 호주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자본이득 감면 폐지를 통해 세수 확보 논의

14 해외 조세·재정 현황 및 전망

< 2012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주요국 조세정책 >

국가	조세정책		세수 효과
	세목	주요내용	
홍콩	법인세	경기부양을 위해 이윤세를 납부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환급예정	(-)
	소득세	경기부양을 위해 근로소득세, 개인별 과세액의 일부 환급예정	(-)
		소득세에 적용하는 공제액 증가	(-)
	인지세	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율 인상	(+)
싱가포르	법인세	중소기업에게 1회성 현금지원 예정	(-)
		개보수 비용에 대한 공제한도 증액 및 즉시상각자산의 범위 확대	(-)
	소득세	소득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장애자공제 인상	(-)
	소비세	투자등급의 금과 귀금속의 수입 및 공급 면세	(-)
대만	법인세	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소득으로 전환	+
		소득기본세 면제한도 축소 및 기본세율 인상(10%→12%)	+
중국	법인세	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(IC)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	-
일본	법인세	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특례제도 신설	-
	소비세	세율 단계적 인상(5% → (14.4) 8% → (15.10) 10%)	+
	석유·가스세	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율인상	+
호주	법인세	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허용	(-)
	소득세	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(32.5%→33%) 및 자본이득 50% 감면 폐지	(+)
	관세	해외여행객에 대한 내국 관세면제범위 축소	(+)
뉴질랜드	소득세	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세액공제 폐지	+
		저소득층을 위한 과세소득 면제 도입	-

주: ()는 논의중인 상태이며, (+)는 세수증대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짐을 의미
 자료: 한국조세연구원, "주요국의 조세동향" 2012년 각 호.

3. 주요이슈

- (일본 양적완화) 신임 총리 아베 신조는 선거전인 2012년 11월 양적완화의 무제한 확대를 선언하였으며 12월 총선 승리 이후 양적완화의 추가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탈피와 엔화 강세 저지 도모
 - 자산매입 기금의 한도를 기존 91조엔에서 101조엔으로 증액하고 장단기 국채 매입 한도를 각 5조엔씩 증액하였으며 저금리정책 유지
 - 양적완화의 확대와 일본 무역수지적자 등이 맞물려 엔화 약세 가속화
 - 작년 9월 달러당 78엔으로 초강세를 보인 엔화는 양적 완화가 시작된 11월 이후 급격히 절하되어 2월 14일 현재 달러당 92.9엔 기록

<엔/달러 환율 변동 추이>



시작	2012-09-14	78.39
종료	2013-02-14	92.87
최대	2013-02-05	93.64
최소	2012-09-27	77.61

자료: 국제금융센터

16 해외 조세·재정 현황 및 전망

- 일본의 양적완화는 미국과 유로존 국가 등 선진국의 경쟁적인 환율방어 개입을 촉발하였으며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상
- 2월 16일 G20 회의에서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채택되었으나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지는 않아 추가적 양적완화를 통한 환율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우리나라도 외환당국을 중심으로 원화 강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토빈세 도입까지 논의

- (중국 소비진작 정책) 중국정부는 2012년 12월 「국내무역 발전 12차 5개년 계획(国内贸易发展"十二五"规划)」을 발표하여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
 - 2015년까지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 32조 위안(연평균 15% 증가) 및 생산재 판매 총액 76조 위안(연평균 16% 증가) 등을 달성 예정

표 1. 12·5규획 시기 국내무역 발전의 주요 목표

지표	2010년	2015년	연평균 증가율
전체 규모 지표			
사회소비품 소매 총액 (조 위안)	15.7	32	15%
생산재 판매 총액(조 위안)	36.1	76	16%
도소매 숙박요식업 생산액(조 위안)	4.4	(7)	(11%)
국내무역 취업 인구(억 명)	1.03	1.3	[2703]
그 중: 국내무역 성진(城镇) 취업인구	0.74	1	[2560]
유통 현대화 지표			
일정 금액 이상 체인 소매기업이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(%)	17.4	20	
전자상거래 규모 (조 위안)	4.5	18	>30%

주: [] = 5년 누적, () = 규획 기준값으로 계산된 고정값 또는 실질 증가율

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(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)에서 12·5규획 기간 국내 총 생산가치 연평균 증가율 7%의 발전목표를 제시함.

자료: 「国内贸易发展"十二五"规划」.

자료: KIEP 북경사무 브리핑, “중국 「국내무역 발전 12·5 규획(國內貿易發展"十二五"规划)」의 주요내용”에서 재인용

-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 및 가격정책, 금융정책 등을 제시

- 구조적 감세를 실시하여 농산품 유통, 체인경영 기업 등을 활성화
 - 농산품과 식품, 의약품 유통 방면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인허가 제도 및 비용체계를 통일
 - 자동차, 가전, 교육, 관광 등 민생개선과 분야에 대하여 신용대출소비 발전을 지원하고 채권 발행, 주식시장상장 등 금융시장을 통한 유통기업의 자금 모집을 보편화하며 신용카드 확대를 추진
- 내수 확대를 위한 국내 소비진작 정책은 경기부양의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해 소득 분배의 개선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

작성자 :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(02-2186-2288)